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운동

2, 3, 5면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6, 7면

국가자본주의  
— 옛 소련에서  
러시아로

10~11면

강준만의  
급진 페미니즘  
비판 신간

15면

제국주의

펠로시 방문 이후 더욱 긴장되는 대만 문제 8~10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험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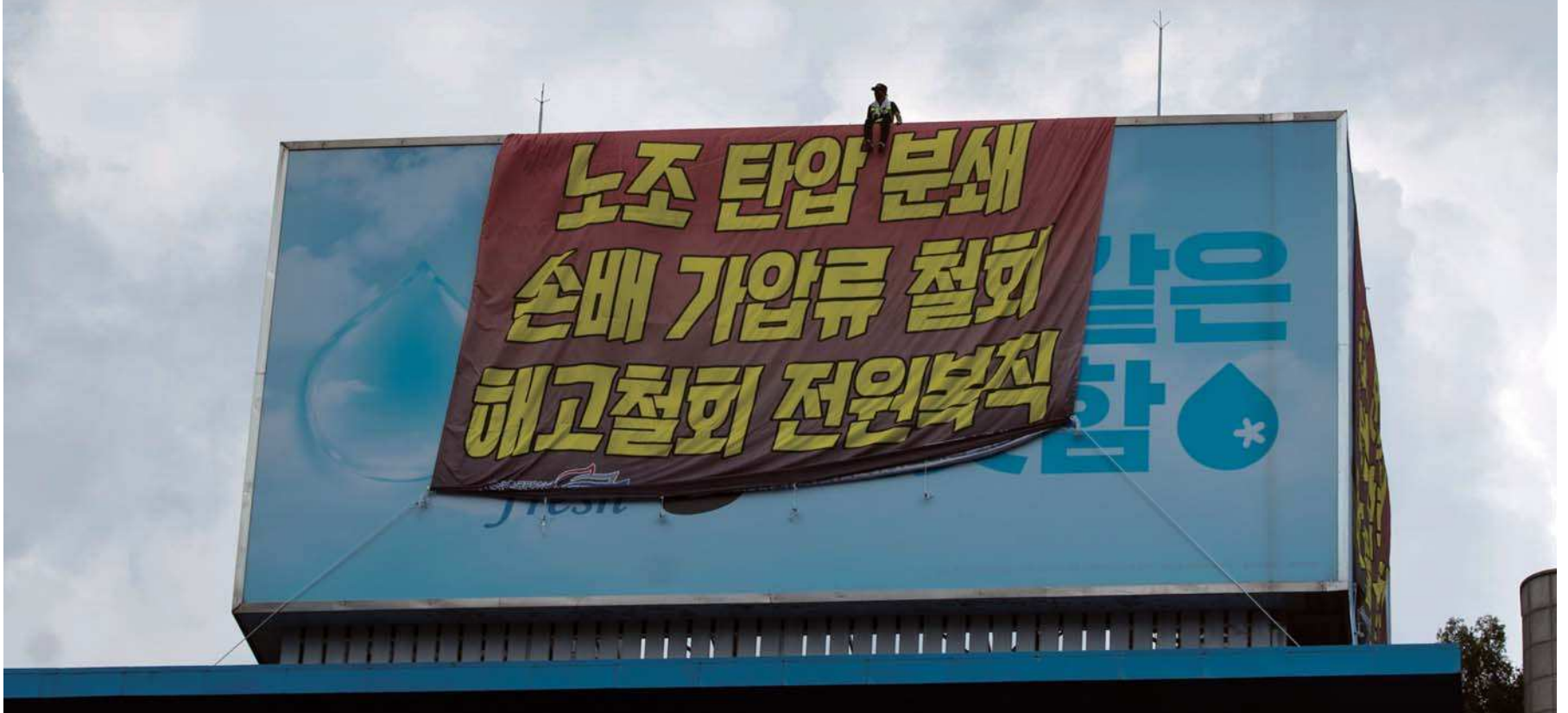
독일 혁명가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반군국주의 투쟁 12~13면

이집트 난민  
인정 운동

16면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저항 정당하다

관련 기사 2, 3, 5면





정부·여당은 “불법”이라고 비난하지만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8월 16일부터 서울 본사 안팎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생애 첫 파업에 나선 노동자 130여 명은 지난 세 달간 끈질기게 싸워 왔다.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대체수송을 막아 서며 소주 공급에 차질을 주고, 그러다 경찰 병력에 밀려 나자 다시 홍전 공장에서 대체수송을 막아 이틀간 맥주 공급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의 폭력 진압 속에 거기서도 밀려나자, 본사 점거 농성에 나섰다. (노조는 8월 24일 본사 1층 로비 농성을 해제하고 옥상 농성을 남겨 두겠다고 밝혔다. 본사 건물 밖에는 나머지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가와 유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십수 년째 낮은 임금(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언제까지 쪼들리는 생활비에 빚을 지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반면, 사용자 측은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내 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2월과 3월에 소주, 맥주 가격을 연속으로 올렸다. 올해 1분기에만 58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음료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41퍼센트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되레 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계약 해지)하고,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 계약 해지 철회, 손해배상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이 본사 점거에 들어가자, 한동안 미디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투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 “강남 한복판”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점거 농성 화물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불법’으로 몰아가기 바쁘다.

윤석열은 점거 다음 날인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대한민국을 숙주 삼은 연가시” 운운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듯이, 하이트진로



사용자 측은 점거 농성자들을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도 했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경찰력 투입을 재촉하고 있다.

친기업 언론들도 일제히 “강남 한복판 불법 점거”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정부에 ‘법과 원칙’을 말로만 끝내지 말고 실행하라고 다투고 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본사 점거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정보 경찰의 기능을 회복·강화하라고까지 주문했다. 노조 사찰과 민간인 사찰을 더 노골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행태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성장과 집회에서 〈조선일보〉 같은 친기업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쫓겨났다.

그들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화물 노동자들의 처지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 비슷한 생계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기업의 이윤 획득에 방해될까 걱정할 뿐이다.

안 그래도 정부는 그간 사측의 경비대 구실을 충실히 해 왔다. 대체수송 차량을 보호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강제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 군색한 거짓말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처지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립서 비스라도 말해야만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용자 측도 군색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은 10년간 운송료를 26퍼센트 인상해 줬거나, 전원 계약 해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말이다.

하이트진로 그룹은 부당내부거래를 들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박문덕 회장 일가가 이익을 추구하고

장남 박태영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입게 된 손해가 “최대 168억 80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의 거짓말에 어처구니없어 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측은 운송료를 인상해 줬 않지만,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답이 없어요. 운송료가 26퍼센트 올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게 없거든요.”

“12명만 해고했다는 것도 말장난입니다. 수양물류는 이미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왔어요. 수양물류의 하청업체 명미인터내셔널과도 운송 계약을 해지해서, 그 조합원들도 덩달아 해고된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 보수 언론들이 사용자 측을 비호하고 있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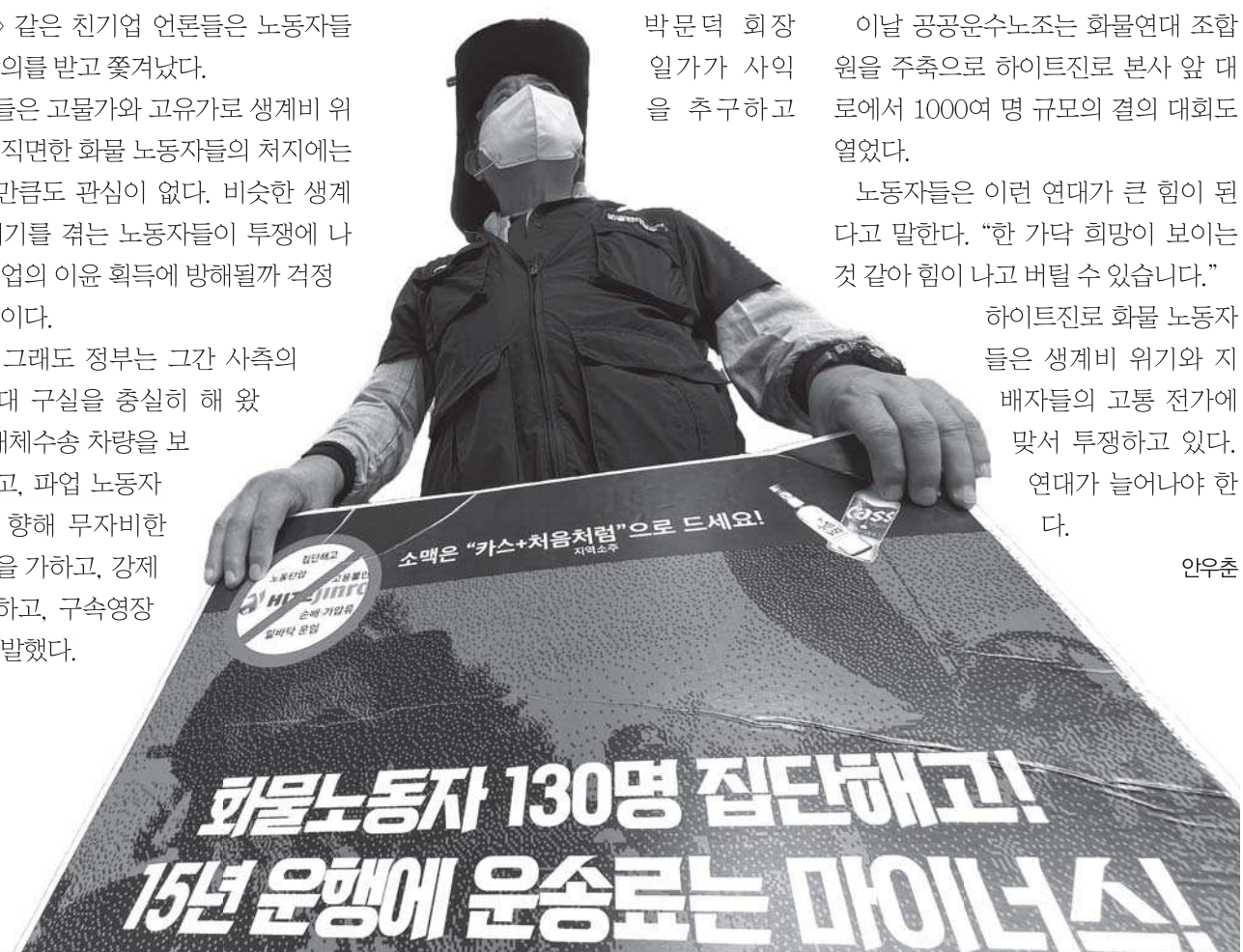
점거 다음날 긴급하게 호소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지지’ 행동에 노동자, 청년, 학생 수십 명이 모여 점거 농성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 다음날에는 5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을 펀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주축으로 하이트진로 본사 앞 대로에서 1000여 명 규모의 결의 대회도 열었다.

노동자들은 이런 연대가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힘이 나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비 위기와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연대가 늘어나야 한다.

안우춘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 생활상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연료비, 식량 위기, 실질임금 삭감이 대중의 생활고를 자극하면서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파나마, 영국 등 곳곳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친 듯이 뛰는 물가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년 만의 최대 물가상승률, 사상 최대 가계부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국민고통지수, 금리 상승으로 대중의 삶이 위기에 처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런 벼랑 끝 생계비 위기 상황이다. “15년 전 운임 수준으로는 못 살겠다”는 외침이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박수동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청주지회장은 이곳에서 일한 지 11년째다. 그런데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가 받는 월급(운송료)은 고작 150만~200만 원이다. 겨우 최저임금(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사용자 측은 정당한 운임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 돈으로 당신들이나 가족까지 부양하며 살아 보라!

안 그래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동종 업계에서 운임이 가장 낮은 편이다. 사는 게 팍팍해도 그동안에는 그럭저럭 버텼다. 그러나 지난해 요소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올해 들어 유가가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은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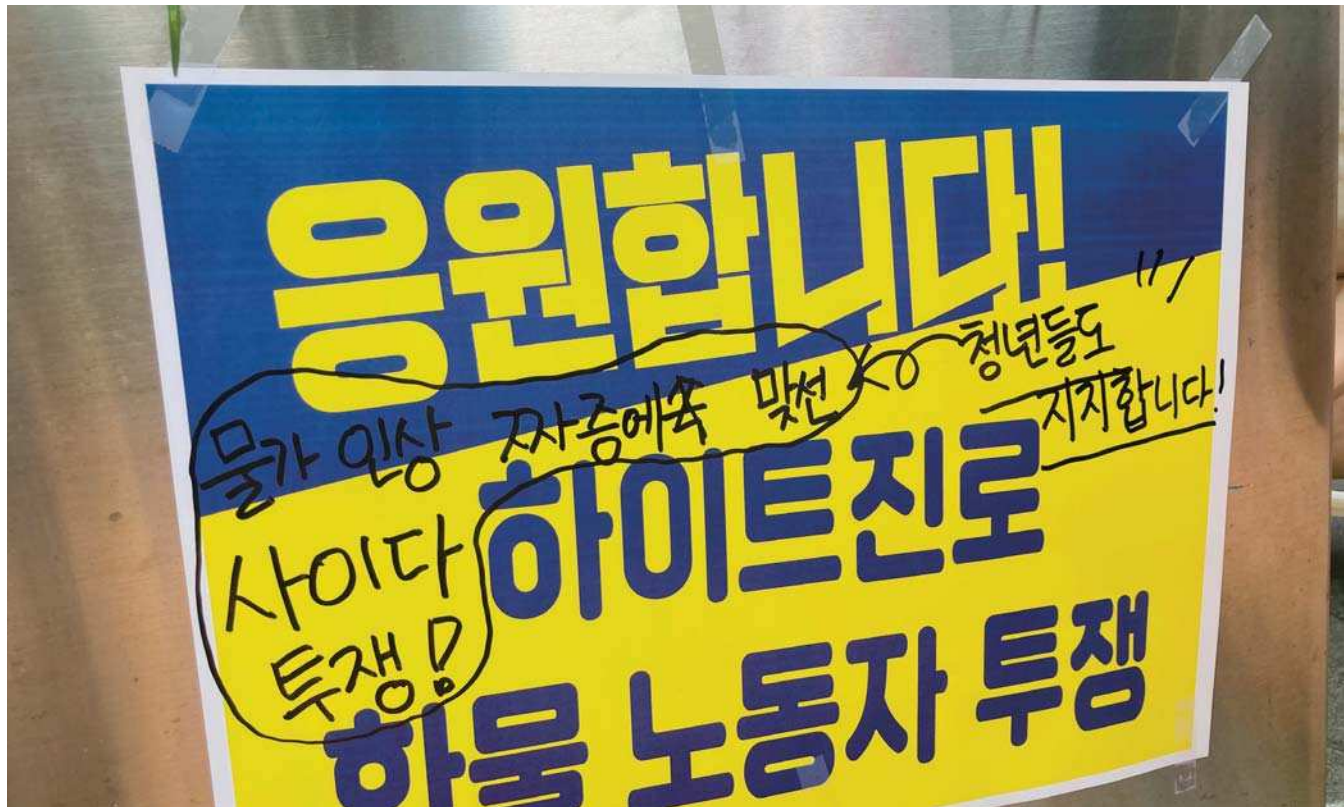
한 노동자가 보여 준 올해 5월 월급 명세표를 보면, 유가가 폭등하기 전에는 기름값이 월 480만 원 들었는데 폭등 이후로는 720만 원이나 지출했다. 도로비, 부가세 등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은 돈은 고작 120만 원이었다. 수입이 240만 원이나 줄었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수입이 준 셈인데, 여기에 물가와 금리까지 똬 맞았다.

“물가와 유가가 급등한 뒤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달 수가 없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고 빚이 계속 쌓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밤에는 화물차를 끌고 택배 일까지 했어요.”

노동자들이 지난 2월 중순 화물연대에 가입해 투쟁에 나선 이유다.

### 역대 최고 청년 경제고통지수

이런 상황 때문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선은 우호적이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노동자 투쟁이 누적되면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해 투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히 노동계급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노동자 연대> 회원들이 지난 몇 주간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한 거리 신문 판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가 앙등 속 청년들이 겪는 고통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가 힘든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물가가 폭등하면서 청년들의 삶은 더 고달프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청년 체감경제 고통지수)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물가가 오르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벌어놓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위기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쥐꼬리인데 금리는 크게 뛰고 공과금과 생활비까지 부담이 커져, ‘독립’을 포기하고 자취방을 빼는 20~30대 취업자들도 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7월 현재 공식 청년실업률은 6.9퍼센트, 체감 청년실업률은 19.8퍼센트다. 이처럼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고용 행진하는 물가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중 부담이다.

대학생 강해령 씨는 말했다. “몇 달 사이에 1000원, 2000원씩 밥값이 오르는 건 처음 봤어요.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힘들어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에 대한 공

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청년 노동자 오선희 씨는 말했다. “생계비 위기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예요. 우리는 호황을 겪어 보지 못한 세대라 항상 쪼들려 살았는데, 지금은 더 막막하죠. 화물연대 파업이 감명 깊은데,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청년들이 호응을 많이 합니다.”

### 노동자 투쟁이 미치는 효과

올해 6월 초 화물연대는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열었다.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이 노동자들은 단 8일간의 파업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내는 위력을 보여 줬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끈기 있게 싸웠다. 노동자 점거가 투쟁 막바지쯤 이윤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자, 새 정부는 각료들을 파업 현장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물가 시기에 생계비 위기에 맞설 대안임을 노동자 투쟁은 보여 주고 있다.

하나의 노동자 투쟁이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영감을 얻고 투쟁에 나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투쟁은 누적된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 유류세를

인하한 것은 화물연대 파업의 압력을 받은 결과다.

더 극적인 사례로 1998년 8월 현대자동차 노동자 점거 파업은 정치적 효과가 낳던 두드러진 사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 공황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고금리·긴축 정책으로 노동계급 대중을 가혹하게 쥐어짰다. 공식적으로도 2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속에 기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가계 파산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현대차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협에 맞서 38일간의 영웅적인 대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당시 투쟁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자들은 경찰 투입 폭력에 대비해 실제로 가슴에 식칼을 품고 연좌할 정도로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투쟁은 김대중 정부가(또 IMF마저) 고금리·긴축 정책을 절반쯤 케인스주의 정책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0년대 재정정책).

이는 노동자들의 단호한 대규모 파업이 경제 위기의 진정한 대안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해야 할 이유다.

##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김문성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하바 있는데, 법무부는 두 범죄를 경제 범죄에 포함시켰다.

같은 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두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전담 검사,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과 수사 공조(협의체) 추진 등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 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

이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밝히기를, 최근 한국은 마약 범죄가 급증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으며, 마약유통사범이 급증했다. 반면,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범죄는 최근 처벌 인원이 급격히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로 범죄 조직들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약화가 반민생적이었다는 암시이다.

신임 경찰청장도 경찰 우선 과제로 마약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단속을 강조했다. 이는 경찰 수사력을 예들려 깎아내린 검찰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겠지만, 한편에선 검·경의 협력 가능성도 보여 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도 범죄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경찰력과 경찰권 행사를 강화하기를 바란다.

윤석열도 올해 7월 말 서울 신촌의 파출소를 방문해, 일선 경찰들에 대한 총기 지급과 사용 강화를 지시했다.



윤석열은 일선 경찰들의 총기 사용 강화도 지시했다

##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은 어땠나

노태우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직폭력과 마약 등 흉악 범죄를 소탕해 “민생 치안”을 확립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됐고, 일선 파출소에까지 M16 소총이 지급됐다. 그 결과, 정부는 폭력범 2만여 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적 압박에 쫓긴 경찰들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고문 수사하는 등 경찰의 가혹 행위가 늘어났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도 범죄 예방을 빙자한 자유 억압과 폭행, 고문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1991년 9월에는 시위 진압에 총기가 쓰이면서 시위 참가자가 아닌 귀가하던 시민(당시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 씨)이 경찰 실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생겼다.

1980년대에 이미 사용자들이나 정부는 구사대나 철거반 등의 용도로 조직 폭력배들을 이용해 왔다. 그래서 적지 않은 조폭 검거는 경찰과의 거래 속에서 이뤄졌다는 평도 많다. 이후 조폭의 수익 사업은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으로 점차 바뀌어 간다.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는 그 일주일 전, 군내 방첩 기관인 국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폭로된 사건이었다. 김대중·노무현 등 야당 정치인들부터 노동·학생 등 재야 사회운동가들까지 감시 대상이었고, 개인별 사찰 카드엔 유사시(계엄 선포 등) 감시 대상들을 즉시 검거할 목적의 정보들도 기록돼 있었다.

정권을 향한 비난과 항의가 커졌다. 전두환의 후임으로 그 자신이 보안사령관을 지냈던 노태우의 대답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기만적인 보안사령부의 명칭 변경(기무사령부)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이른바 ‘3저(환율·금리·유가) 호황’이 1989년경에 끝나면서 심각한 경제 불안정이 오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또한 1987년 이후 등장한 조직 노동계급의 전투적 저항을 억눌러야 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3월 검·경·안기부·보안사 등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공안 정국’(보편적인 국가 탄압을 가리키는 당시 용어)을 조성했다. 1990년 초에는 3당 합당으로 국회의원 216석의 ‘보수 대연합’ 정부를 꾸렸다.

그리고도 정치적 위기를 막지 못하자, 그해 가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경찰력 강화, 검문·검색 강화, 대대적인 검거 선포(60여만 명 넘게 검거) 등을 벌인 것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조폭과의 전쟁은 노동자 투쟁 탄압이나 좌파 검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1989년 공안정국은 이듬해 범죄와의 전쟁을 거쳐 1991년 봄 ‘분신 정국’으로 불리는 폭력적 시위 진압으로 이어졌다. 그 시기에 국가보안법이 개악됐고, 경찰청이 출범했으며, 수백 명의 정치적 구속자가 생겼다.

어느 누구도 윤석열 정부가 선의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실제로 질 나쁜 범죄를 상당 정도로 없앨 것이라고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 보수 정부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우는 이유

윤석열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이유는 지배계급이 겪고 있는 경제·안보 위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심각하다. 게다가 지금의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에 한층 해결이 까다롭다.

사용자들은 물가 급등과 생계비 위기를 배경으로 임금 인상 투쟁이 대중적으로 확산될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은 체제 수호(보안)라는 성격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흉악 범죄와 그 피해를 부각시켜서, 체제 실패의 책임을 지엽말단 문제로 전가하고 국가가 보통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강조하는 이유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쿠데타 직후 범죄 소탕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또한 우파 정부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방·연대·관용보다는 위축·불신·무관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그

래야 개인들이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경찰력 강화가 정당화되며, 기성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고립·위축시키기 쉽다.

윤석열 정부는 범질서 수호자로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핑계로 경찰 무장을 강화하려 한다.

윤석열은 전 뉴욕시장 줄리아니의 강한 경찰을 모델로 얘기하는데, 이런 언행은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범죄는 자본주의, 특히 부패가 심해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필연적으로 달라붙는 기생충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이 노태우 정권 때만큼 침체하지 않아서 지배자들도 권위주의적 방식보다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타협 기제들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위기가 더 깊은 수준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 청년들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나는 8월 17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행동에 참가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고, 이 투쟁이 이 나라의 평범한 청년과 학생,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학생이라 방학 중엔 돈을 바짝 벌여 놔야 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현실의 굴레가 삶을 옥죄어 오고 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자취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가장 줄이기 쉬운 지출인 식비를 줄이는 청년들이 나를 포함해 참 많다.

금리도 엄청 올라서 내 코딱지만 한 반지하 자취방 전세 자금 이자가 최근에 월 5만 원도 넘게 올랐다.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는데 막막하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도 올리려 한다는 소식에 한숨만 나온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숨 쉬고 살아가려면 돈을 버는 만큼 써야 하니 목구멍이 아주 대검찰청이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것도 답답한데 수입이 그대로인 것이 더욱 힘들게 한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이 15년 동안 제자리였다고 들었다. 15년 전이면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던 시절이다.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7000~8000원이다. 열악한 운임에 말문이 막힌다.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청년·학생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8월 20일 신촌에서 진행된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의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캠페인에 참가한 청년학생들

말이 안 되는 낮은 수입은 단지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저임금은 전에 딱 한 번 좀 올랐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지난 5년간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4년의 인상률보다 못했다. 물가 인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게 5년 전인데 아직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을 강제하고 우리 삶을 방어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도 돈 못 벌게 해 주겠다'고 해야 한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사람들과 지배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 위기의 시기에 유일한 대안임을 보여 주고 있다.

기업주들, 정치인들의 위선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들은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침체된다면에서도, 기름값과 공공요금을 올리고 금리를 올리며 평범한 사람들의 피를 쭉쭉 빨아 먹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주와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 주고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아 넘기며 물심양면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정부가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홍천 공장 앞에서 투쟁할 때 경찰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이 너무 분노스럽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도 투쟁하자! 승리하자! 삶의 조건을 지키자!' 하면서 노동자들이 싸움에 나설 용기를 얻을 것이다. 청년과 대학생, 그리고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계비 위기에 맞선 세계적인 저항의 연장선에 있다. 이 투쟁이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임재경 연세대 학생,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 현대중공업 박근태 전 지부장 등 2년 실형

## 노동자는 구속,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법원이 현대중공업노조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정연수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 실형 2년을 확정판결했다. 같은 내용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유는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 투쟁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의 사소한 마찰을 꼬투리 잡았다.

그러나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공격이었다. 이에 맞서 투쟁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그런데도 2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자본가들

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다른 많은 노동 판결에서는 미적대는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 판결이 나온 지 2개월 만에 신속하게 판결했다.

반면, 정부는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현 부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신동빈 등 기업주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영석은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벌어진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6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다(정부는 이 625건의 책임을 사면해 줬다). 게다가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게 만든 책임자는 사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한 노동자는 감옥에 가뒀다.

윤석열은 취임 후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을 탄압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고, 경찰 진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번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의 2년 실형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 속에서 벌어진 탄압이다. 노동운동이 위축되길 바랄 것이다.

8월 22일 감옥에 갇히는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을 배웅하려 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

14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구속되는 두 동지를 보며 분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분노와 슬픔을 모아 투쟁으로 반격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불안정한 정세와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공격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이 24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위축될 필요 없다. 당당하게 저항을 건설해 나아가자.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가

김승주

국가보안법은 흔한 생각과 달리 사문화되지도 않았고 구시대 유물도 아니다.

2017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국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39명이 입건됐다. 이 중 70퍼센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건수를 보면, 2019년 305건, 2020년 154건, 2021년 250건에 달했다.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 혁명동지가를 부른 민중당(현 진보당) 당원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충북 지역 활동가들 등이 구속되거나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취임한 지 100일이 갓 지난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와 북한 연구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한 해군 사병이 주체사상에 관한 책을 읽고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그 남편 김삼석 씨,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보안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흐름은 윤석열 정부가 간첩 조작 책임자인 공안 검사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앉히고, 독재 정권하에서 경찰 꼬나폴로 학생·노동운동을 파괴하며 승승장구한 보안경찰 출신 김순호를 경찰 수뇌(경찰총장)에 앉힌 일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국가 관료들과 억압기관들을 더 강하게 통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좌파와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 한다. 국가보안법은 지배자들이 그런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한 무기이다.

이 나라 지배자들은 남한이 남북 분단과 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여전히 놓여 있고, 북한이 계속해서 간첩을 남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독재 정권과 우파 정부들은 물론 민주당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처벌은 국가보안법 전체 처벌의 1퍼센트대에 불과했다. 그조차 다수는 조작되거나 부풀려진 것들이었다. 2007~2017년 간첩죄는 18건에 불과했고 이 중에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이 조작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많았다.

### 진정한 표적

국가보안법의 실제 적용과 처벌은 제7조(찬양·고무)에 집중돼 있다. 2007~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의 74퍼센트가 7조 위반이었다.

7조는 자의적 잣대로 죄를 덮어씌우기 좋은 조항이다. 가령 박근혜는 김정일을 만나서 김일성을 좋게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반면, 누군가는 김일성 관련 서적을 읽은 것만으로도 인신 구속이 된다. 시중 서점에 버젓이 판매되는 책이나 노동조합이 나눠 준 대의원대회 문서 등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적 문서가 되곤 한다.

또, 국가보안법은 북한 친화적 사상과는 관계 없는 좌파들(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노련, 해방연대 등)도 이적단체로 규정해 탄압했다. 반체제적 사상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본질적으로 국가 “내부의 적”을 향해 있고, 내부의 적을 탄압해 한국 자본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임을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책들. 도서관에서 누구나 빌릴 수 있는데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적 표현물'로 둔갑된다

국가보안법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이런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이승만이 4·3 제주 항쟁, 10월 여순 항쟁 등 잇따른 민중 봉기를 분쇄하기 위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본따 만들었다. 미군정의 주도로 갓 태어난 자본주의 국가를 방어하려고 국내 노동자·민중 운동과 좌파를 겨냥해 만든 법인 것이다. 당시에 항쟁 참여자와 남조선노동당 당원들이 주된 표적이 됐다.

남한 지배자들은 이후 수십 년간 후발 자본주의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권위주의 체제의 힘에 기댔다. 국가가 자본을 집중시켜 축적 과정을 주도했고, 노동자 조작취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투쟁 물결 이후에는 민주적 권리들이 전보다 확장되고 군사 독재 시대도 막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탄생의 배경인 냉전 시대도 소련·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저물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반독재 야당 출신인 김영삼, 김대중도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았다. 김영

삼은 “집권해 보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더라” 하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은 집권 기간에 보안법 위반으로 1164명이나 구속했다. 사흘에 두 명 구속된 꼴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노동계급 운동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한 덕분에 국가보안법 적용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한 사례로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탄압을 계기로 당내 사회민주주의 경향과 자민통 경향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내분을 겪었다.(사회민주주의 진영은 이후에도 결정적일 때 국가 안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국가보안법 탄압은 이어졌다.

군사 독재에 반대했던 자유주의 정부들, 심지어 가장 최근의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조차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왔다는 사실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단지 독재 정부나 우파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한 지배계급 전체가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유용한 무기라는 것이다.

## 어떻게 싸워야 할까

국가보안법이 누구를 탄압하든, 그것이 노리는 최종 효과는 운동 전체를 위축·분열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탄압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 방어하면서 폭넓은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의 진정한 동력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대중 운동에

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상의 자유를 일관되게 방어해야 한다. 볼테르의 유명한 격언 —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 처럼, 국가가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함께 맞

서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의 본질과 역사를 이해한다면 지배계급 정당인 민주당이 이법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정부들)은 대체 입법이나 일부 조항 손질하기 등의 김빠지는 타협

안을 내놓고 국가보안법 반대 NGO나 좌파 일부를 포섭하려 해 왔다.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는 행정 권력과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 7면으로 이어짐



#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웬 20세기 감염병?

8월 22일 현재 공식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50만 명이다. 확인된 감염자만 6억 명인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실제 규모가 그보다 몇 배 더 클 것이라고 발표해 왔다. 앞으로 대유행이 몇 번이나 더 닥쳐올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감염병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다.

올 5월 유럽 남부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치명률도 낮고 흉터도 거의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십 년 동안 콩고 분지와 서아프리카 지역을 벗어난 적 없는 이 감염병이 세계 여러 곳으로 퍼진 것은 전파 방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이런 변화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초기에 꼭 벌어지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한 이유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이스라엘에서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징후가 포착됐다.

소아마비는 신경을 마비시켜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남긴다. 호흡기뿐 아니라 소화기에 감염돼 배설물이 흘러들어간 하천 등을 통해 대규모 전파가 이뤄지는데 치명률도 매우 높다. 소아마비는 효과적인 백신 보급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로 가난한 나라들에서 사용하던 백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낳았다고 본다. 의료 인력과 설비가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백신이 사용돼 왔는데, 여기에 사용된 일부 바이러스가 생존해 변이를 일으킨 듯하다고 한다. 다행히 현재 사용되는 주사제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병원체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자본주의에서 발전한 주류 의학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발견



원숭이두창(위)과 먹는 소아마비 백신(아래) 자본주의는 더 많은 감염병 위기를 만들고 있다

하고, 그것과 접촉을 피하거나 박멸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여겨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살충제, 항생제, 마스크, 격리 등)을 발전시켜 왔다. 물론 이런 수단들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부 의학자들은 감염병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감염병 위기는 단순히 병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병원체와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간 측의 약점은 커지고 병원체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롭 월러스나 마이크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듯이 공장식 축산업의 확대와 이를 위한 삼림 파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접촉 빈도를 높이고, 밀집한 가축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키웠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가속한 자본주의적 농축산업과 삼림 파괴, 보건 서비스의 후퇴와 민영화,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백신과 치료제 보급의 실패 등으로 간염이나 결핵 같은 오래된 질병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연구들은 기후 변화가 또 다른 감염병을 낳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을 연구하던 일부 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박쥐 서식지 분포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후 변화로 중국 남부에 서식하게 된 박쥐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연구들도 세계 곳곳에서 생태 안정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연적으로 격리돼

있던 미생물들이 인간의 거주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활 조건과 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반면, 병원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를 예방하려면 환경 파괴를 막고 사회 기반 시설과 보건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전면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이런 얘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 적지 않은 의학자들이 여러 감염병들은 사실 빈곤이나 오염,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서 비롯한 '사회적 질병'이라며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이미 대규모로 파괴된 생태계 속에서 인류가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피하려면 주류 의학과는 다른 새로운 과학도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병원체를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에 관한 총체적 인식 속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가들의 세계관이 자연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물리적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한다."(*독일 이데올로기*)

자본가들은 자연현상을 마치 기계의 작동처럼 이해하려 한다. 그런 이해에 바탕을 둔 응용이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늘리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병원체가 생산에 방해가 되면(그 전까지는 방치한다),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박멸하면 그만이라고 여긴다. 인간의 몸은 무언가 부족하면 채워 넣고, 고장 나면 기계를 수리하듯이 고치려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주류 의학의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과 보건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끝내고 완전히 다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다.

장호중

## ▶ 6면에서 이어짐

일각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국가보안법 탄압의 빈도가 과거보다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보기도 한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자신들은 별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여기

기도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성장한 결과로 사상의 자유를 더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 결을 떠난 적은 한번도 없다.

최근 한국 자본주의를 둘러싼 경제 침체 조짐과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때문에 국가보안법 탄압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학교·작업장·거리

등 자신의 활동 공간들에서 누군가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으면 앞장서서 방어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꾸준히 정치적 주장을 내놓으며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인내심 있게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김영익

이 기사는 8월 1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펠로시는 홀로 대만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투기 등 미국의 강력한 무력이 그를 호위했다. 그렇게 대만에 도착해서는,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사실 펠로시의 이런 입장은 위선이다. 그는 예전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를 해외 비밀 감옥에서 물고문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선출된 대통령을 쿠데타로 제거하려던 베네수엘라 우익을 지지하기도 했다. 펠로시의 인권 옹호는 ‘그게 미국 제국주의에 이익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미국 최고위급 정치인인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도발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중국군은 펠로시가 대만을 떠난 직후인 8월 4일부터 대만 주변을 에워싼 봉쇄 훈련을 벌였다. 이 훈련으로 대만의 주요 항로와 항구가 막혔다. 심지어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 4발이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쪽 바다에 떨어졌다.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해 침공하는 모의 훈련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과 일본 군함을 미사일로 저지할 것임도 보여줬다. 중국의 무력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는 접근하지 않았던 대만 인근으로 중국 전투기와 군함들이 연일 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펔은 조만간 미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한동안 고조될 듯하다. 이 긴장은 대만해협을 비롯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긴장 고조는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왜 이토록 악화되고 있는지,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주변 지역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미국 정치권의 대만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79년 미국은 소련을 고립시키려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그러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존중하기로 했고,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다만 미국은 대만관계법 등으로 대만의 안보를 보장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는 변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의회는 대만여행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미국과 대만 정부 고위 관료의 상호 방문을 권고하는 법이었다. 2020년에 제정된 타이베이법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대만보증법, 전략적경제법 등 대만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법안이 의회를 속속 통과해 왔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이 함께 내놓은 대만정책법이 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은 대만을 미국의 중

요 동맹국으로 인정하고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법안이 의제가 될 만큼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정가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왜 그럴까?

중국은 지난 수십 년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미국을 서태평양 너머로 밀어내려 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원유 같은 중요 자원을 바닷길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바다를 1945년 이래 미국이 지배해 왔다. 중국은 이를 불안하게 여겨 미국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훨씬 먼 동쪽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유사시 대만을 비롯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미군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려고 애썼다. 그래서 어느덧 중국의 군비 지출이 일본과 대만을 합친 것의 4배가 넘는

다.

중국의 이런 시도는 미국의 세계 패권 지위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매우 중대한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중국의 도전을 좌시할 수 없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 제해권 경쟁 한복판에 얹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 너머, 즉 제1도련선 너머로 밀어내려 하는데 대만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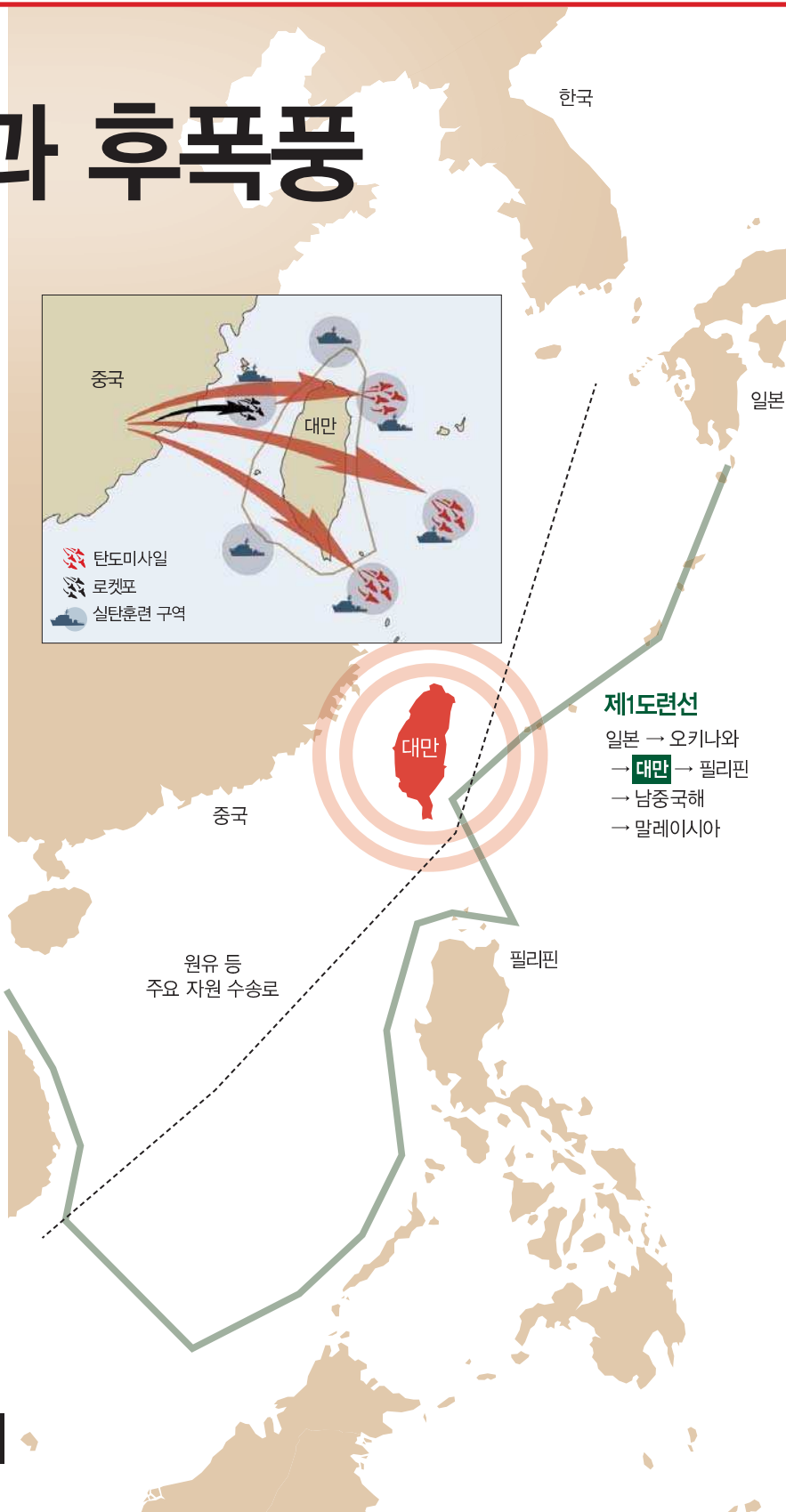
그래서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은 결정적 이점들을 손에 쥐게 된다. 제1도련선 너머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다. 또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고 한국·일본 등이 의존하는 바닷길도 중국이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일본만 해도, 해상 교역의 40퍼

센트와 에너지 수입의 90퍼센트를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체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미국으로선,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

최근 또 다른 이유에서 대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반도체 핵심 생산국이다. 그래서 미국정·재계 인사들은 대만의 반도체 생산 기반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는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중국에도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대만 장악을 통한 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 왔다. 대만의 독립 선언을 막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분리 독립을 원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도 대만 독립 선언에 자극받을 것이다.





## 후폭풍과 주변에 미치는 파장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8월 16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대만해협에 “뉴 노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리들의 정치적인 [대만] 방문에 대응해 광범하고 실질적인 순찰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중국 해군과 공군이 대만해협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미국을 적잖이 자극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 봉쇄 훈련으로 미군의 대만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으니 말이다.

안 그래도 미국 국방부와 유력 싱크 탱크들은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충돌하면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결과를 계속 내왔다. 미군 전력은 전 세계에 분산돼 있는 반면, 중국은 본토 가까운 곳에 전력을 비교적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가에서 대만 문제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8월 15일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중국의 “뉴 노멀” 주장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재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무력에 저항할 대만의 능력을 키우고, 역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증강, 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만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는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일본은 인접한 대만에 걸린 자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최근 집권 자민당은 “대만 유사 사태는 곧 일본의 유사 사태이고, 일미 동맹의 유사 사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에 대한 미일동맹의 관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난세이 제도에 미사일 부대 등 군사력을 전진 배치해 왔다. 또한 “반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경항모, 중거리미사일 같은 무기를 도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자민

당은 5년 이내에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까지 올리려 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군비 지출 규모는 단숨에 세계 3위로 치솟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증대하는 것은 강대국들이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긴장 증대는 주변국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당장 대만 문제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미군 정찰기가 대만 봉쇄 훈련 중인 중국군을 감시하려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진해 대만해협으로 갔다. 주한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바깥 어디든 투입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만해협 분쟁이 벌어진다면, 성주의 사드 같은 주한미군 전력이 동원되고, 제주 해군기지나 오산 공군기지 같은 곳이 미군의 발진 기지가 될 수 있다. 한반도가 대만을 둘러싼 충돌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에 방한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만 문제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국내의 상당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에 기울어 있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다. 이것은 대만을 둘러싼 충돌에 휘말릴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북한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 증대와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증강을 상당한 위협으로 느낀다. 지난해 북한 외무성 부상은 대만 주변에 집결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대한 무력이 북한에도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런 압력 때문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배 관료들이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중 경쟁은 대만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커다란 불안정을 낳고 있다.

▶ 11면으로 이어짐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대만 인근에서 펠로시를 호위했다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대만 인근에서 펠로시를 호위했다

## 대만을 둘러싼 최근의 갈등 증대

시진핑 정부는 대만 내 독립 주장에 거칠게 반응하며, 미국이 대만의 독립 주장을 고무할까 봐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20여 년 만에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기 시작하는 등 중국의 무력시위가 강화됐다. 중국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2016년 이래 8개국이 대만과 단교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대만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관통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빈도를 이전보다 더 늘렸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5차례나 승인해 줬다.

또 바이든은 중국을 겨냥해 동맹을 결집해 왔다.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은 매우 주목할 만한데,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했다. 바이든은 영국·호주와도 중국을 겨냥한 오키스 동맹을 결성했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 반발해 시진

핑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는 미군을 겨냥한 조치였다. 자국이 선포한 영해에 진입한 미군 함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자 커트 캠벨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전쟁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에 소홀하지 않으니 ‘오판’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한 것이다. 이후 바이든은 유사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것은 그 전까지 미국이 유지해 오던 전략적 모호성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 정부가 군비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명분을 제공해 줬다. 대만도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일본도 장사정 미사일 등 군비 증강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 옛 소련에서 러시아로 국가자본주의 이론의 의미와 오늘날 의의

국제사회주의경향(ST)의 창립자 이가엘 글록스타인(유대계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필명은 토니 클리프)의 저작 《소련 국가자본주의》(국역: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책갈피))가 영국에서 재출간된다. **사라 베이츠**가 국가자본주의론을 살펴보고, 옛 소련과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국가체계가 붕괴한 오늘날에도 이 저작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밝힌다.

국가자본주의론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변질되면서 형성된 사회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그 사회는 진정한 사회주의보다는 서구 자본주의와 더 유사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전통의 창시자 토니 클리프는 1940년대 중반에 국가자본주의론을 발전시켰다. 당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인지 여부를 두고 견해가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토니 클리프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동원하고 당시 구할 수 있던 자료를 더할 나위 없이 꼼꼼하게 조사해, 소련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언제나 소련·동유럽 경제의 동역학을 이해하는 방법 그 이상이었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을 명료하게



1968년 억압적인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서 일어난 체코 프라하의 봄

해명하고,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이 부활하는데 일조했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론은 소련, 소련의 위성국들, 중국, 쿠바 등에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었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좌파의 다수가 의회와 생산수단 국유화를 통해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방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론이었다.

요컨대, 국가자본주의론은 사회주의를

‘위로부터’ 구현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경우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었다.

그런 주장은 오늘날에도 허다하다.

## 혁명

클리프는 러시아 혁명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하는 데서 먼저 출발했다.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는 전 세계에 파장을 미쳤다.

역사상 최초로 보통 사람들이 사회의 운영을 맡았다. 자신들의 일터를 접

수하고 소비에트(평의회)를 건설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집단적으로 결정했다.

러시아 제국 전체가 혁명가들의 통제 하에 들어왔지만,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당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국제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전의 러시아 제국이 “소수 민족들의 감옥”이었다고 했다. 이전에 제국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라도 이제 원한다면 얼마든지 [분리까지 포함해] 독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혁명이 살아남으려면 경제적 선진국들로 확산돼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내전과 외국의 침공으로 이 신생 국가[혁명 러시아]는 황폐해졌다. 그러자 노동자 권력과 거기서 비롯한 이상은 빛이 바래 버렸다.

가장 헌신적인 노동자의 다수가 제국주의와 반혁명에 맞선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 혁명의 심장이었던 공장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폐허가 됐다.

한때 치열한 논쟁이 살아 숨쉬던 소비에트는 빈사 상태가 돼 [당과 국가] 관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관료층이 등장해 노동자 통제를 대체했다. 바로 그 관료층이 이오시프 스탈린 권력의 원천이었다.

▶ 11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해야

물론 미국과 중국에게 대만해협 전쟁은 아직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월가 투자자들에게 중국은 탐나는 시장이고, 중국 지배자들도 서방 경제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상호 의존이 양측의 전쟁을 막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상충하는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호 적대감이 계속 증대해왔고, 양측의 갈등을 열전으로 뒤바

꿀 변수가 이 지역에 많다.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만해협 외에 다른 지역으로 번질 공산이 크고, 최악의 경우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는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이 붙는 위게임 결과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신속히 승리하기 어렵고 전쟁 장기화 속에 대만해협 전쟁이 팼·일본·호주 등지로 번지며 핵전쟁으로 치닫한다고 전망했다. 참으로 두려운 시나리오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 지역을 위협에 빠뜨리는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우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키우는 미국에 반대해야 하고,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대만 문제에 관여한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럴듯한 거짓말일 뿐이다. 미국이 대만 독재자 장제스를 후원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또,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일부 좌파는 중국을 미국에 대항하는 진보적 세력으로 여기고,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부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중국은 힘을 과시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제국주의 강대국이다.

대만인들은 중국과 통일할지 아니면 분리해 살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대만 국민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가 대만해협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경합하는 제국주의 체제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모두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편드는 것, 군비 증강 등 지역 불안정에 일조하는 행위 일체에 반대해야 한다.



## ▶ 10면에서 이어짐

1924년 레닌 사망 후, 스탈린과 그 지지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려고 이전의 혁명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1928년 스탈린은 “5개년 계획”으로 러시아 경제를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5개년 계획”으로 급격한 공업화 과정을 밀어붙여, 러시아가 서방 경제 및 서방의 전쟁 기구들과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계획은 러시아 전체 국민 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빨아들였는데, 이후 계획들에서 이 비율은 더 높아졌다. 스탈린은 이전의 혁명적 국제주의를 폐기하고 이를 “일국사회주의”라는 새 원칙으로 대체했다.

즉, 러시아가 나머지 세계와 유리돼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산업화는 농민들에게서 막대한 잉여를 추출해서만, 그리고 농민들을 토지에서 내몰아 공장으로 몰아넣음으로써만 이를 수 있었다.

## 지배계급

스탈린의 관료들은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기능을 했고,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이 이론 혁명의 성과 일체를 공격했다.

이런 동역학 속에서는, 민간 엘리트 층이 아니라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문다. 국가는 누가 소유하는가? 답은 물론 지배계급이다.

즉, 민간(개인) 자본가들이 아니라 소련 국가가 자본을 축적하고, 세계 시장의 지배를 두고 경쟁한 것이다. 그러나 서방 자본주의와 달리 소련 국가는 국내의 경쟁 없이 그렇게 했다.

서방과의 쟁투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영역은 군비 축적이었다.

서방의 탱크 · 총기 · 미사일에 맞대응하기 위해 생산이 막대하게 늘었고, 노동자들은 5개년 계획에서 생산을 2배 혹은 3배 증산하라는 목표를 할당받았다.

1938년이 되면 군수산업이 전체 생산의 약 29퍼센트를 차지했다.

클리프는 이렇게 주장했다. “군수산업은 소련 경제 체제에서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에 노동시간은 늘었고, 임금은 줄었으며,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열악해졌다.

1940년 8월 1일 소련 정부는 농업 노

동자들이 수확기 동안 “아침 5시나 6시에 시작해 일몰시까지” 일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 숙청

그러나 장시간 노동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931년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에는 거의 200만 명 가까이 수용돼 있었다.

한때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안테 칠리가는 오랜 시간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됐다. 칠리가는 숙청이 한창이던 1930년대에 수용소 수용자의 수가 약 10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했다.

스탈린은 강제 수용소, 뻥뻥한 배급제, ‘질서’를 지키는 경찰 국가를 동원해 [1917~1923년] 혁명기에 쟁취된 것 일체를 끌어버렸다.

기근이 기승을 부렸고, 사람들은 비참한 조건 속에서 살아야 했다. 클리프는 이렇게 썼다. “한편에서 부가 축적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선 빈곤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국가 관료는 호화롭게 살았다.

소련의 소득세율표에 나타난 연소득 범위는 단돈 1800루블에서 자그마치 30만 루블에 이르렀다. “특권층과 천민”이 모두 있는 사회였던 것이다.

클리프는 이렇게 썼다. “정부의 고위관리나 기업 경영자 또는 성공한 작가 등에게는 모스크바에 저택이, 크림반도에 여름 별장이 있고, 자가용 한두 대 굴리고 하인 몇 명 부리는 일 등등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비상 상황에서 노동자들한테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쥐어짜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전시에조차 각 계급의 생활 상태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클리프는 소련이 이런 식으로 “관료의 가차없는 지령에 따라 국가의 수중에 집중된 현대 산업 경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클리프는 이렇게 썼다. “소련에서는 시초 축적기의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은 피가 흘렸다. 스탈린은 영국이 수백 년 걸려서 이론 것을 수백 일 만에 해치웠다.”

소련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에게서 뽑아낸 막대한 잉여를 산업 확장에 투입함으로써만 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는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개괄한 것과 똑같은 과정이었다.



1940년대 중반에 국가자본주의론을 발전시킨 토니 클리프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자본들 간 상품 판매 경쟁 때문에 개별 자본은 “축적을 위한 축적”을 하게 됨을 보여 줬다.

여기에는 이중의 함의가 있다.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새 시기를 불러올 것임과 동시에, 지배계급을 타도할 잠재력이 있는 노동계급을 만들어 낸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그 어떤 보안 경찰이나 강제노동수용소도 노동계급을 무기한 억누를 수는 없다.

## 축적

클리프는 《소련 국가자본주의》에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이론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줬다.

클리프는 국가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의 무계에 짓눌려 결국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서방 자본주의의 위기들과 근원이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다른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죄다 무너질 때, 클리프는 놀라지 않았다. 동독을 비롯한 그 나라들에서 노동자들

이 정치체제 타도에 결정적 구실을 했음이 명백해졌을 때도 클리프는 놀라지 않았다.

클리프 이론의 생명력 덕에, 그가 창당을 주도한 사회주의노동자당은 — 다른 좌파 대부분과 달리 — 소련과 동유럽 몰락으로 전혀 사기저하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이론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사상 [이 옳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여겼다.

스탈린주의 국체들이 거의 다 몰락한 오늘날, 러시아가 혁명적 노동자 국가에서 실패한 국가자본주의로 전락한 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다소 불분명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일들은 아직도 살아남아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소련 국가자본주의》의 재출간에 부치려고 새로 쓴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클리프의 책은 스탈린주의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 주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18호 / 번역 김준호

## 📖 추천 책

##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

토니 클리프 지음, 정성진 옮김, 책갈피, 496쪽, 22,000원

##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소련·중국·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통 오링컨 지음, 천경록 옮김, 책갈피, 144쪽, 8,000원





역사에서 배운다

#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군국주의 비판

## 군국주의는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비롯한다

김인식

최근 반년 동안 <노동자 연대>가 꾸준히 다룬 주제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문제였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현 시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국들 간의 군사적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주요국의 지배자들은 지구상에서 공존하려면 군사적 경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군사비 지출의 큰 부분(39퍼센트)을 차지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무서운 기세로 군비 지출을 늘려 왔다.

최근에는 독일이 군비 경쟁에 뛰어든 있는데, 1년치 국방예산을 1000억 유로(약 135조 원)로 책정했다. 지난해 국방예산의 갑절이 넘는다.

한국도 무기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국이 개발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7~2021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2~2016년에 견줘 무려 177퍼센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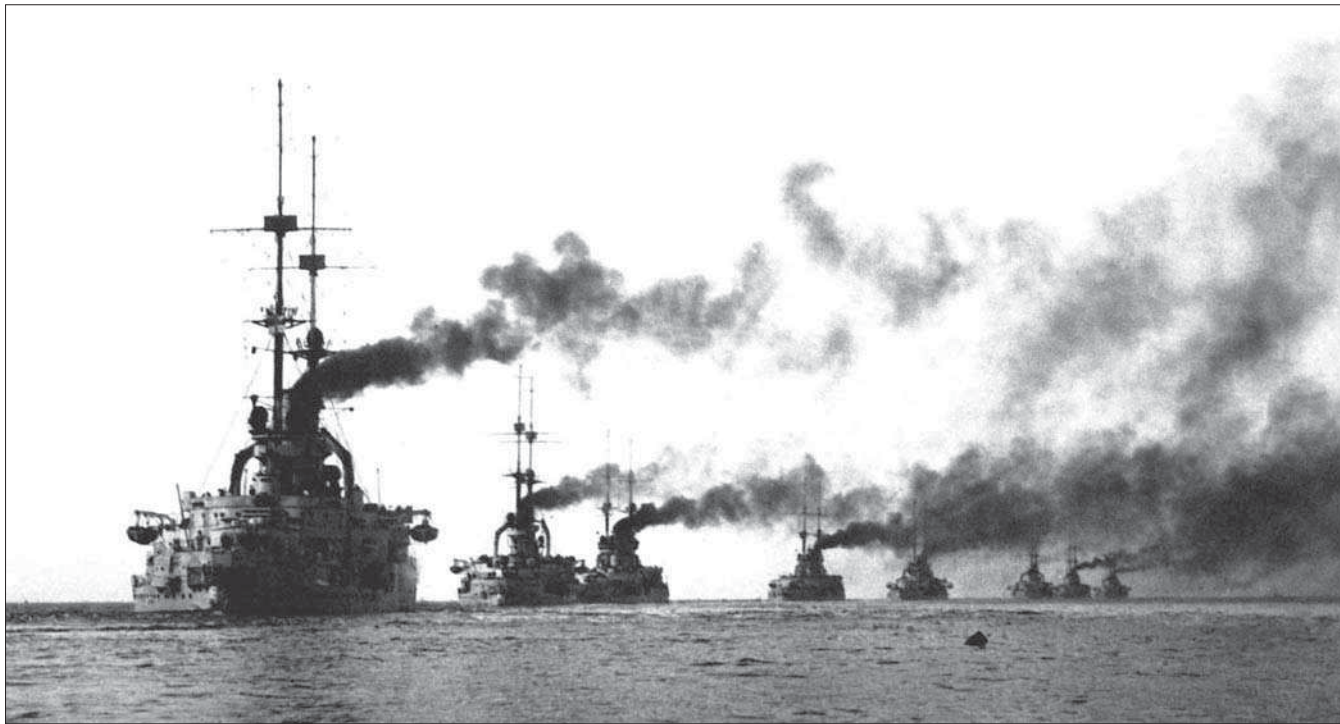
### 광기

이런 광기 어린 무기 경쟁의 동학은 무엇이며,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점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진지하게 천착해 온 문제였다.

그중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의 혁명적 좌파 카를 리프크네히트(1871~1919)가 있었다. 리프크네히트는 정치 활동 내내 군국주의와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한 결과 독일 지배계급과 사민당 지도부 모두로부터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돼 심지어 혁명 초기에 살해당했다.

리프크네히트는 1907년 《군국주의와 반군국주의》라는 중요한 저작을 썼다(영역판: 2011, 208pp.).

당시 독일은 영국과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영국 해군이 1906년 처음 진수한 드레드노트(20세기 초에 사용된 전함)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다. 독일은 1907년에 처음 드레드노트



자본주의적 군국주의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독일 해군의 전함 중대

를 건조했고, 장차 더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자 당시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는 영국 해군의 우위를 유지하고 독일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1억 파운드를 지출할 것이라고 주영 독일 대사에게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해군 증강 계획을 밝히며 이렇게 기염을 토했다.

“독일은 젊고 성장하는 제국이다. 독일의 무역은 세계적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 독일은 매우 먼 바다에서도 이 무역과 여러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를 보유해야 한다.”

독일 사민당의 지도부는 자국의 무력 증강을 지지했다. 이에 반대해 카를 리

프크네히트는 드레드노트 추가 건조를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국회의원이 되고서도(1912~1918) 리프크네히트는 독일 지배계급과 소속 당 지도부를 거슬러 군국주의 반대 운동을 이어나갔다.

### 군국주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맞설 것인가

《군국주의와 반군국주의》는 1906년 만하임에서 열린 독일 청년노동자협회 제1차 총회에서 한 연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에게 사회주의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바로 판매 금지당했고, 리프크네히트는 반역죄로 기소돼 1년 6개월 동안 수감됐다. (변호사이기도 한) 리프크네히트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

면서 베를린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리프크네히트는 이 책에서 군국주의의 역사적 부상,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군국주의의 양상, 사회주의자들(제1차세계대전 개전 전까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었다)의 군국주의 반대 투쟁을 대략 살펴본다.

리프크네히트는 군국주의가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군국주의는 자본주의에 특유한 것이 아니다. 계급으로 분열된 모든 사회 질서에서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군국주의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군국주의와 다른 특징이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보편적 군 복무 제도에 기반한 군대와 조응하며, 이 군대는 보통 사람들에 기반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군대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군대이다. 상비군 형태를 띠 때도 있고, 민병대 형태를 띠 때도 있다. 상비군은 자본주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심지어 정상적 형태로 나타난다.”

군국주의는 외국을 침략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내부 탄압 수단이기도 하다. “계급 분열이 날카로워지고 노동계급의 의식이 발전하면 군국주의가 언제나 전면에 부각된다.”



독일의 반전주의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 '카를 리프크네히트를 추모하며'



#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누구인가?

리프크네히트는 군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사회민주주의[당시엔 혁명적 사회주의]는 군국주의만 떼어 내어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군국주의는 오로지 마지막 계급사회 시스템인 자본주의와 함께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병역 거부, 무력 행사에 대한 개별적 거부, 개별적 저항을 크게 강조”하는 아나키즘과 달리 “사회민주주의적 반군국주의는 계급 투쟁에 기반”을 둔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혁명가들은 “계급투쟁과 이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 계급투쟁에서 군국주의의 기능, 계급투쟁에서 노동계급이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을 설득해야 한다.

리프크네히트는 특히 청년들 속에서 반군국주의 활동을 해야 함을 크게 강조했다. 당시 독일의 군 복무는 의무였고, 사병들은 주로 노동계급과 농민으로부터 충원됐다. 대개 귀족 가문 배경에서 나온 장교들은 매우 야비하게 사병들을 괴롭혔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청년 노동자들은 사회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반군국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제를 수행한다면 그들은 이길 수밖에 없고 그럴 것이다. **청년을 얻은 사람이 군대를 차지한다**[강조는 원저자 리프크네히트의 것]”

《군국주의와 반군국주의》 때문에 리프크네히트는 독일(프로이센) 국가의 탄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민당 지도부에게도 미운털이 박혔다. 당 지도부는 리프크네히트가 사병들 속에서 반군국주의 주장을 하며 군국주의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것을 미친 짓으로 여겼다.

리프크네히트를 어릴 때부터 알아왔고 자식처럼 아꼈던 아우구스트 베벨 당대표도 ‘모험주의적’ 제안이라며 리프크네히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민당 지도부는 독일의 무력 증강을 반대하면 보통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당 지지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음에도(1907년 사민당의 제국 의회 의석수는 43석이었고, 1912년에는 110석으로 늘었다) 합법적 지위를 잃고 독일 지배자들이 사민당을 더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1871년 8월 13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1919년 1월 15일에 죽었다(우익 군장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사실상 독일 사민당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사민당 대표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카를의 대부였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사민당 내 급진좌파로 보냈다. 1919년에 살해당하기 몇 년 전에 사민당에서 분당해 나와 혁명적 정당 ‘스파르타쿠스동맹’을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군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해 온갖 비방과 수감을 당했다. 반역죄 혐의로 두 번 수감됐고, 1916년에는 사민당 의원단에서 제명됐다.

리프크네히트의 인생 스토리는 오랫동안 극소수한테에서만 지지를 받던 혁명적 좌파가 특정 상황에서는 돌연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독일 사민당은 1914년 제1차세계대전 개전 전에는 반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1914년 7월 25일까지도 사민당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지배계급은 평시에 당신을 억압하고 경멸하며 착취하고 총알받이로 이용하고 싶어 한다. 폭군의 귀에 들어가도록 도처에서 외쳐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전쟁을 중단하라. 국제 형제들이여, 영원하라.”

그러나 사민당은 8월 4일 제국 의회에서 전쟁 수행 비용 마련을 위한 공채 발행에 찬성했다. 사민당 의원단 회의에서 리프크네히트와 다른 의원 13명은 전쟁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14명은 그 뒤 당 규율의 적용을 피하려고 전쟁 찬성 당론을 지지했다.

1914년 12월 2일 의회에서 전쟁 공채 추가 발행 여부를 묻는 두 번째 투표가 있었다. 다른 모든 사민당 의원들은 정부 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리프크네히트는 이번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다.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크게 기뻐했다. “리프크네히트만이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대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대표한다. 나머지 독일 사민당은 냄새가 고약한 송장이다.”



## 고약한 냄새

그러나 리프크네히트는 용기를 발휘한 대가로 큰 고초를 겪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는 데도 군대에 징집됐다. 그가 전투 참가를 거부하자 군 지휘부는 동부 전선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임무를 맡겼다. 리프크네히트는 건강이 매우 나빠져 귀국했다.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 주위에 모인 사민당 내 소수 반전파는 대중의 애국주의적 히스테리에 맞섰지만, 오랫동안 고립되고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나 사태 전개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크는 1915년 베를린에서 두 번의 반전 시위를 조직했다. 처음에는 100여 명이 모였고 두 번째는 1500명이 참가했다.

1916년 초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크는 사민당 내 좌파 당원들을 모아 스파르타쿠스동맹을 창립했다.(스파르타쿠스는 기원전 73~71년 로마에 맞서 전설적인 노예 반란을 이끌었던 검투사의 이름이었다.)

사민당의 규율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사회주의 전술·전략을 제시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스파르타쿠스동맹은 반전 선동을 하고, 불법 유인물을 반포해 노동자들과 전선의 병사들의 불만을 서로 연결하고자 했다.

1915년 5월 리프크네히트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유명한 제목의 리플릿을 노동자들과 병사들 속에서 광범하게 반포했다.

“국제 노동계급 투쟁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다. 독일 대중의 주적은 독일에 있다: 독일 제국주의, 독일의 전쟁 정당, 독일의 비밀 외교.”

스파르타쿠스동맹은 1916년 메이테이에 맞춰 반전 시위를 조직했다. 불법 집회였는 데도 1만여 명이 모였다. 개전

이래 최초의 규모 있는 반전 시위였다. 리프크네히트는 “전쟁을 반대하라! 정부를 타도하라!” 하고 연설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었음에도 그는 구속됐다. 그리고 군사법정에서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반 동안 수감됐다.

학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전선의 야만이 국내로 옮겨졌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불만도 늘었다. 리프크네히트가 선고받던 날 군수공장 노동자 5만 5000명이 파업했다!

이 노동자들은 사민당 평당원들 사이에서 늘어나던 전쟁에 대한 불만으로 새롭고 폭넓게 형성된 좌파의 일부였다.

독일의 급진좌파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이런 분위기를 묘사하는 시를 썼다. “전쟁으로 유혈이 낭자하지만 수프는 부족했다 / 그리고 수프가 부족하자 알게 됐다 / 전쟁은 당신의 전쟁이 아니다 / 수프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1918년 10월 많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압력을 받았고 리프크네히트를 석방해야 했다.

11월에 4년 간의 전쟁 동안 쌓인 비통함이 폭발했다. 킬과 빌헬름스하펜 항구의 해군 사병들이 반전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독일 전역에서 거리 항쟁과 파업 물결이 일었다. 전선에서 사병들은 총을 내려놓고 전쟁을 거부했다.

며칠 만에 황제가 쫓겨나고 정부가 퇴진했다. 노동자 혁명이 제1차세계대전을 끝낸 것이다. 노동자들은 보통선거권, 8시간 노동, 단체교섭권 등 주요 개혁도 성취했다.

그러나 사민당 지도자들은 끝까지 혁명의 분출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려고 운동의 전선으로 달려갔다.

1919년 1월 초 (설익은) 봉기 시도는 패배했다. 그 결과 1월 15일, 동갑내기 친구이자 동지였던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크는 사민당 지도부의 사주를 받은 자유군단(우익 민병대)에 붙잡혀 살해됐다.

리프크네히트는 국제주의와 계급투쟁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무기임을 몸소 실천한 혁명가였다.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4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5

#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 있는 유럽 최대 핵 발전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장악한 이 핵발전소와 그 주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포격이 벌어져 왔는데, 8월 들어 더 심해졌다. 이는 자칫하면 재앙적인 폭발이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포리자 핵발전소의 반응로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덮여 있지만, “병커버스터와 같은 현대의 무기는 … 이런 방벽을 뚫고 노심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스탠포드대학교 핵안보 교수 로드 에워)

핵발전소 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다. 예컨대, 핵발전소로의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예비 전기 공급 수단마저 가동이 불가능해지면 냉각 시설이 멈춰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교전 상황은 발전소 가동 인력의 실수 가능성을 높인다.

핵발전소와 그 일대에서 벌어진 포격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서로 비난하며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포리자 일대를 수복하려고 무모한 공격을 벌인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공격이 오히려 러시아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그런 자작극을 벌일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러시아가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볼모 삼아 극도로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무모한 모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8월 1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핵발전소에 “포격을 하거나 핵발전소를 엄폐물 삼아 포격을 하는 러시아군 병사들은 … 특별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우크라이나 당국은 7월 초까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포리자 핵발전소 사찰에 반대했다. 그런 사찰이 러시아의 점령을 승인하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8월 들어 이곳을 둘러싼 위기가 첨예해지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IAEA 사찰을 요구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를 따라 기존 입장을 바꿨다.

8월 19일 푸틴은 IAEA 사찰단 파견에 합의해줬다. 그러나 IAEA 사찰 과정과 그 후에 벌어질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찰이 오히려 긴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은 1992년 IAEA의 핵시설 사찰을 수용했지만, IAEA는 사찰 결과가 부족하며 특별 사찰을 요구했고 이것은 1994년 전쟁 위기의 계기가 됐다. 한편, 북한의 사찰 거부는 그 전에 이라크를 사찰했던 IAEA 사찰관들이 이라크 주요 시설의 정보를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에 넘겨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

전쟁 초부터 커져온 핵재앙 위기

3월 5일, 포격을 받고 있는 자포리자 핵발전소

## 서방의 전쟁 지원

무엇보다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쟁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그런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기존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려 한다.

자포리자 핵발전소와 그 인근의 포격이 빈번해진 것도, 우크라이나 남부의 요충지 헤르손을 수복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와 맞물린 것이다.

하이마스(HIMAR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한 서방의 첨단 무기 체계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지휘소, 저장 시설, 보급로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시설에서 일어난 잇따른 폭발은 이런 무기 체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러시아가 재래전에서 ‘핵심적 이익’을 위협받을 시 전술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방침을 오래 전부터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권은 러시아 지배자들에게 핵심적 이익이 걸린 곳이다.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실전 배치될 전망이 다가오던 7월 17일에 이미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한다면 “심판의 날”을 촉발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서방의 개입 모두에 반대하는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에서 그런 운동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노력 일체에도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이원웅





서평 |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 강준만 교수의 급진 페미니즘 비판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 교수의 신간이 얼마 전 나왔다. 다소 도발적 제목의 《엄마도 페미야?》이다.

넓은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성평등 사상과 운동을 가리키고 그 내에는 때로 상충하는 여러 조류가 있다. 강준만 교수가 논하는 페미니즘은 오늘날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 페미니즘은 사회의 근본 분열이 젠더, 곧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 여성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 강준만 교수는 급진 페미니즘의 일부 측면에 꽤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2018년에 출판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에서 급진 페미니즘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과는 눈조가 사뭇 다르다.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밝힌다. “나는 그간 페미니즘의 ‘정체성 정치’가 불가피하다며 지지해온 사람이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는 젊은 남성들의 ‘반페미’ 정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비난하는 걸로 대처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안이한 대응 방식엔 동의하기 어려웠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한 측면에 대한 반감과 비판이 늘어 왔는데, 강준만 교수의 변화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듯하다.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에 맞서는 데서 일정한 구실을 했지만, 일부 과도한 측면들은 성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감을 키워 왔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 측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그의 문제의식은 매우 적절하다. 그의 전제들이 마르크스주의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우파가 급진 페미니즘의 약점을 이용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집권까지 한 상황에서 인기 있는 다작 저술가의 문제제기는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성찰을 자극하는 문제들

저자는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는 20대 남성이 많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코스프레”를 했지만 이대남과 관련된 정책들에서 위선과 무책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24쪽, 14,000원

또한 그는 문제인 정부의 위선을 꼬집을 뿐 아니라 페미니즘 진영도 성찰할 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자 대 여자라고 하는 전통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집단주의적 접근으로 [여성 차별에 대한] 남성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어’ 반감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문제인을 친권 페미니스트로 여기며 ‘박원순 사건’과 ‘윤미향 사건’에서 ‘내로남불’을 보여 줬다고도 강 교수는 비판한다.

그는 이것이 페미니즘이 ‘상징 투쟁’, ‘진영논리’, ‘정치적 당파성’, ‘집단주의’ 등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페미니즘 진영은 생각이 다르면 죄다 ‘백래시’나 ‘팬스플레인’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측의 이런 독단적 태도가 특히 이대남의 반감을 낳고 페미니즘을 고립시킨다고 한다.

이는 강 교수 자신의 경험도 반영된 불만인 듯하다. 지난 4월 저자가 〈한겨레〉 칼럼에서 페미니즘의 “피해 서사의 한계”를 지적하자, “예상대로” 곧 “팬스플레인”이라고 저격당했다.

저자는 페미니즘이 “혹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 성찰해야 한다”며 이렇게 항변한다. “메타페미니즘 담론에 대해 남자가 말하는 건 주제넘고 싸가지 없고 불경不敬한 짓인가? … 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적敵으로 만드는가?”

이런 지적은 당연하다. 본지도 급진 페미니즘의 일부 과도한 주장과 실천이 평범한 사람들의 반발을 낳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데 일조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남성 일반을 잠재적 성범죄자나 가해자로 취급하는 주장은 실천에서 평범한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강력한 투쟁을 만드는 것을 가로막고, 운동 안에서 여러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분

열을 낳았다.

그런데 좌파의 대다수도 급진 페미니즘을 수용하며 분열을 주도하거나, 그에 추수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 비판의 자원

강준만 교수는 성별 이분법적 페미니즘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효과를 낸다는 점은 여러 사례를 들어 보여 준다. 그러나 그는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적 약점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급진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위계적 체제로 본다. 이 사회의 근본적인 분리를 계급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을 유지하고 이로부터 득을 보는 사람들이 지배계급이 아니라 남성 일반에 있다고 보며 남성을 규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이 득세하는 여성운동은 결국 정치적으로 개혁주의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급진 페미니즘의 중간계급 지향 리더들은 자본주의 내에서 공식 진출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전략(성 주류화 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물론 여성이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을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이 공직에 진출해도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 차별이 자본주의 체제(임금노동 착취, 가족제도를 통한 노동력 재생산)에 토대를 두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강준만 교수는 페미니즘이 ‘부족주의’ ‘정파성’에서 벗어나 그 이상과 대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옹계 지적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그의 분석에 여성 차별의 원인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이 결여된 결과다.

특히 계급 분석의 결여는 문제적 주장도 낳는다. 예컨대 강준만 교수는 세대론을 수용하면서, 이대남과 달리 ‘기성세대 남성’은 여성 차별의 수혜자라고 주장한다. 성별임금 격차가 30대 이상부터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상적인 경험주의이고, 급진 페미니즘의 문제적 가정을 절반쯤 수용하는 셈이다.

여성의 낮은 임금으로 득을 보는 것은 ‘기성세대’ 남성 일반이 아니라 자본

가와 국가관료 등 지배계급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 노동계급은 남녀, 세대를 불문하고 차별로 결국 손해를 본다. 차별은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그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혼란

민주당 페미니스트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언급되는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저자는 혼란스럽다. 강 교수는 민주당 페미니스트들이 “피해호소인” 용어를 쓴 것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우파 변호사 김재련을 여러 번 우호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김재련 입장을 수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김재련은 진상 규명에는 진지하지 않은 채 서울시와 민주당이 쓴 “피해호소인” 표현이 “2차가해”라고 비난하며 이 문제를 우파에 유리하도록 이용했다.

‘피해자’, ‘가해자’는 법률적 사건이 됐을 때 편의상 지칭하는 용어다. 팩트 여부나 확실성 여부를 특별히 문제 삼을 때는 ‘피해호소인’, ‘가해지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박원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울뿐더러, “피해호소인” 용어도 이미 여성운동 일각에서 독단적 성폭력 중심주의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용돼 온 용어이다.

무한 확장된 ‘성폭력’ 개념이나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해 개념은 실체적 진실 인식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합리적 의혹 제기를 가로막는 구실을 해 왔다.

강 교수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박원순 사건’을 암묵적으로 단정함으로써 급진 페미니즘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저자가 독선적 태도를 보이는 페미니즘 측에 성찰을 촉구하려고 우파 여성단체인 ‘찐여성주권연대’도 우호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우려했던 처사다.

젠더 갈등을 해소하려면 평범한 여성의 지위를 낮게 유지하는 자본주의와 이를 지키려는 (수혜자이므로) 지배계급의 시도에 보통의 남녀들이 단결해 맞서야 한다(물론 트랜스젠더가 이에 꼭 포함돼야 한다). 결국, 단결된 계급 투쟁이 열쇠다.

성지현



##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이집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7월 6일부터 법무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4~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혹하게도 지난 8월 10일 이들의 난민 즉각 인정 요구를 거부하며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의 현 엘시시 정권은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켜 대중운동을 진압하고 집권했다. 이후 수천 명을 살해하고 6만 명이 넘는 반정부 활동가들을 구속했다.

이집트 난민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집트 난민 수용을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 민주주의

그러나 8월 10일 법무부는 “난민 인정 여부가 특정 국가 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난민 신청자의 개별적인 신청 사유와 박해, 전체적인 국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난민 인정 결정을 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만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강대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하며 벌이는 제국주의적 개입을 지원해 왔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점령에 동참해 파병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측을 지원하며 확전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독재와 인권 유린을 피해 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집트 난민들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인권 운운하며 제국주의 경쟁에 동참하는 한국 정부의 위선을 밝히 드러낸다.

한편, 난민법과 한국이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의 난민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이에 따르면 개별적인 박해가 아닌 전쟁, 경제적 곤궁, 환경 재난 등을 피해 온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8월 21일 이집트 난민들의 2차 서울 도심 행진.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모였다

애초 협약이 냉전 시기 상대 진영에서 넘어와 체제 선전에 이용할 가치가 있는 소수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난민을 낳는 원인이 전쟁임에도 한국에서 대다수 시리아, 예멘 출신 난민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다.

### 입증 요구

그렇다고 개별적인 박해를 받은 난민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규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소위 “가짜 난민”을 걸러낸다고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고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이 수많은 증거를 제출해도 수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박해 위험을 피해 비밀리에 혹은 황급히 피신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증거를 모으고 심사를 받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등을 견디지 못해 한국을 떠나기도 한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이들이 피난해 온 이유가 무엇이든 전체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1994년 이래 한국의 누적 난민 인정률은 2.8퍼센트에 불

과하다.

이처럼 법무부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성이 없다. 법무부는 이집트 난민들을 즉각 인정해야 한다.

### 연대

현재 한국은 난민 문제가 유럽만큼 첨예한 정치 쟁점은 아니고, 난민의 수도 훨씬 적다.

그러나 난민 신청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8년 한 해 1만 6000건을 넘었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감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또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입국, 올해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울산 정착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에서도 난민 문제가 때로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을 보여 줬다.

경제·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지금보다 더 이용하려 할 수 있다.

예전대 정부는 2015년 테러방지법 제정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당시 입국한 시리아 난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되는 양 언론플레이를 했다. 또 지금도 난민 신청자 대부분을 경제적 목적의 “가짜 난민” 취급한다.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면 일자리 부족 등의 불만을 떠넘기는 데 난민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의 난민 배척적 정책과 인종차별에 맞서 난민과의 연대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집트 난민들이 주도적으로 투쟁에 나선 지금이 좋은 기회다.

지금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은 투쟁을 이끄는 난민들의 규모와 지속성 면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난민들의 투쟁보다 더 전진한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적극 연대를 호소해 함께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유대감도 쌓고 서로 고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본사 점거 투쟁 중인 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는 본지에 실린 이집트 난민 소식을 보고 “우리와 처지가 다르지 않더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집트 난민들이 각자 난민 심사 대응에만 머물렀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집트 난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임준형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9월 1일(목) 오후 8시  
발제 **박이랑** (노동자 연대) 기자, 난민 분야 전문 통번역사  
특별 발언 **이집트 난민 난민 지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

참가신청 **bit.ly/090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